

통일경제브리핑

이슈
테러지원국 목록 해제 협상
: 주요 경제제재 내용과 해제 전망

동향

1. 북한에 진출한 평화자동차
- 미니밴 '빠꾸기3호' 단연 인기

2. 북일 관계 정상화 회담
- 죽은 사람 살려내야 문제 풀겠다는 일본의 궤변

북한 단신



이슈 | 테러지원국 목록 해제 논의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 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려

3월 8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북한 김계관 부상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이미 합의한 문제다. 그러니 차차 두고 보면 뭔가 풀리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김부상의 발언에는 지난 6일부터 열린 뉴욕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지원국 문제는 비단 북미 간의 외교적,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테러지원국 문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전략 물자에 대하여 미 상무부가 제약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의해 적용되는 미 수출관리 규정에 의하면, 미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에 포함된 미국산 상품을 재수출하거나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KT가 개성공단에 대한 통신장비 반출 허가를 얻기 위해서 1년 6개월의 긴 시간이 걸렸으며, 개성공단 진출 초기에 일부 업체들은 생산 설비를 반입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국 공장에서 필요한 생산 공정을 거치고 다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파행적 생산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¹⁾ 북한 또한 2005년 3월, 노동신문의 개인 필명 사설을 통하여 테러지원국에 의한 개성공업 전략물자 반출입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그들은 그 무슨 ‘테러지원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없게 규정한 관련 법규를 개성공업지구로 진출하는 남조선 기업들에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개성공업지구 건설장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물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 밑에 군사정전위원회 미국측 성원들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상주시키기 위한 비열한 놀음을 벌이었다.”²⁾

아래에서는 테러지원국 목록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과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미 법률이 규정하는 해제 조건과 정치적 상황을 통하여 해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테러지원국 목록에 따른 주요 경제제재 내용

1987년 11월, KAL기 폭파 사건을 지목하며 미국은 1988년 1월20일,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미 수출관리법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의 무역, 호혜적 개발도상국 지위, 미국 군수품 통제목록, 대부분의 경제원조, 수출입은행의 여신, 국제금

용기관의 지원 등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되면 미국의 경제제재의 3대 핵심 법률인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 수출관리법 6조 j항에 따라 무역법, 세법 등 몇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한 제재 또한 동시에 받고 있다.³⁾

예를 들어,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902조를 보면, 1979년 수출관리법6(j)에 따라,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한 국가나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내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를 금지되고 있다.

[표1] 테러지원국 규정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 내용

제재 목록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관련 법규
수출입 통제	무기관련 품목 수출 통제	미 군수품 통제목록(U.S. Munitions List) 수출, 판매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미 상업 통제목록 수출, 판매 금지 수출허가제(30일 전 의회 통보)	수출관리법
	투자자의 세금공제 금지	테러지원국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공제 금지	수출관리법
	수입 금지	수입허가제	국제안보발전협조법
	호혜적 무역지위 금지	호혜적 무역지위 적용 금지 개발도상국 호혜 지위 적용 금지	무역법 수출관리법
경제원조 금지	경제원조 금지	경제원조 금지 테러지원국에 원조를 실시한 국가 대외원조법에 대해서도 경제원조 금지 최빈국 부채탕감 프로그램 참여 금지	대외원조법 대외지원법
자산 통제	금융 제약	수출입은행의 여신 금지	수출입은행법
	정부 여신 금지	수출에 대한 정부 여신 금지	무역제재개혁법
	국제금융기구 지원 반대	국제금융기구의 여신을 반대하는 투표권과 발언권 행사 의무화	국제금융기관법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테러지원국 규정에 의해 미국은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통제, 경제원조 금지, 자산 통제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제제재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9년 수출관리법에 의해 상업통제 목록에 포함된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 판매 그리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수출허가제를 필요로 하며, 국무부장관은 허가 품목에 대해 30일 전에 상하원 대외관계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북한은 호혜적 무역 지위인 정상무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 혹은 일반특혜 관세제도(GSP)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식량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1961년 대외원조법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외지원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제원조와 대출, 보험 그리고 수출입 은행의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에 의해,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 프로그램 참여 또한 금지하고 있다.¹⁾ 북한은 대외원조법과 대외지원법에 의한 경제지원 제약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 ‘특별관심국가’로 지목한 1988년 국제종교자유법, 2003년 이후 가장 심각한 인신매매 기준국(Tier 3)으로 분류한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경제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다.

경제제재의 세 번째 내용은 자산통제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 조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가입조차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97년 4월, 2000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 신청을 했으나,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기도 하였다.⁴⁾ 미국 국제금융기관법 1621조는 “테러리스트 국가에 대한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 반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9년 수출관리법과 1961년 대외원조법에 근거하여, “개별 국제금융기구의 미국 집행 이사들이 국무부가 규정한 국가 혹은 기관에 대한 기금의 사용 혹은 대출을 반대하는 투표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것을 재무부가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조차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ADB 가입의 경우처럼 현재는 가입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BDA 문제에 집착을 보인 것과 연계하여 보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비롯하여 정상적인 국제 금융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목록 해제를 둘러싼 북미 외교 역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북한 해제를 둘러싼 북미 외교적 협상은 이번 북미회담을 포함하여 세 번째이며,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일들이다. 2000년에 처음 협상을 벌였고, 2003~2004년에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0년까지 북미 외교의 중심축은 1994년 체결한 제네바 협정이었다. 주요한 의제는 이번 2.13 합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였다. 미국의 상응조치에는 중유, 경수로 건설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지원과 경제제재 해제가 포함되어

1) 물론, 대외지원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비확산, 어린이 생존, 식량 원조, 질병 예방, 국제적 재앙 같은 프로그램 등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북 식량 지원, KEDO 자금 지원 또한 대외지원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있었지만, 테러지원국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1999년 10월 페리보고서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요청했을 때, 북한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요구하였다. 2000년 2월, 북한이 요구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테러지원국 목록 해제였다. 2000년에 클린턴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문제로 한국과 일본과 논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을 지지하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찬성하였지만, 일본은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무산되었다.⁵⁾

그 후 2002년 10월, 이른바 ‘농축우라늄 계획 시인설’로 제네바협정이 파기된 이후, 2003년 8월 6자회담이 개최된 이후 다시 북한이 제시한 협상 테이블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올라갔다. 2003년 12월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1순위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일괄타결안을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다음번 6자 회담에서 ‘말대말’의 공약과 함께 첫 단계의 행동조치라도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로서 우리가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그리고 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의한 중유, 전력 등 에너지지원과 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⁶⁾

북한은 2004년 2월과 7월의 6자회담에서도 핵 활동 동결에 대한 대가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하였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테러지원국 목록이 현재 북한에게 부과되는 경제제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테러지원국 논의를 둘러싼 북미 협상은 3단계에 돌입했고, 베를린 합의를 기반으로 한 2.13 합의에서는 문서화되기까지 이르렀다. 2.13 합의 2조 3항에서는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목록 해제 요건과 전망

미 수출관리법 6(j)조에 의하면,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처럼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45일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이 하원 의장과 상원 대외관계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이전 6개월 동안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공; (2) 미래에도 어떠한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보장 제공.²⁾

2) 만약, 해당 국가의 정권이 선거나 쿠데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결정 이전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무르익었던 2000년 2월, 클린턴 행정부는 수출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제를 위한 4단계 선행조치를 요구하였다: (1) 더 이상 테러리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문서화된 성명 발표; (2) 과거 6개월 동안 테러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공; (3) 국제적 반테러협정 가입; (4) 과거 테러리즘 지원 목록 발표.⁷⁾

이것은 현재 북미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4단계 선행 조치 중 남아있는 5개의 반테러협정 가입과 과거 테러지원 행위에 대한 협의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2000년 3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테러리즘 해제에 관한 회담을 벌인 적이 있다. 그 결과 이미 2000년 10월6일,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 테러가 세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화학 생물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저지되어야 한다” 는 점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또한 2001년 11월 3일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 협약’과 ‘인질 억류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에도 가입할 의사를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밝힌 후 12일 정식 가입하였다.³⁾

현재 13개 반테러 협약⁴⁾ 가운데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은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여섯 가지이며, 이미 그 해 12월 방북한 스웨덴 특별사절단에게 반테러 협약 가입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또한, 12월26일 유엔 안보리에 반테러에 관련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결과들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2년 또 다시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핵문제로 북미관계가 대결 국면에 이르게 되면서 완전 무산되었다. 따라서 2002년 보고서에서부터, “북한은 1987년 이후 테러리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짐”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반테러협약에 가입하고 과거 테러리즘 행위에 대한 협상만 벌인다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률에 의하면 매년 4월30일까지, 국무부장관이 테러리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원 의장과 상원 대외관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관리법 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테러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11월부터 국무부가 검토하기 시

3)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01/11/03), "우리는 세계적으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반테러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 데 대한 국제협약' 에 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인질반대 국제협약' 에도 가입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주요 반테러협약들에 기본적으로 다 참가하는 것으로 된다."

4) 반테러협약은 기존 12개에서, 2005년 4월 UN에서 핵테러방지 국제협약이 채택되어 13개로 늘어났으며, 2006년 4월 기준 100여 개 국가가 핵테러방지 국제협약에 서명하였다.

작한다. 매년 1월 말, 국무부장관의 자문에 따라 상무부장관이 의회에 테러지원국 목록을 제출하며,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해제에 관한 결정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한 번도 의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었다.

현재 북한은 BDA 문제에서 보듯, ‘말’이 아닌 ‘실물’로써 대북정책 전환을 입증을 요구하며 4월말에 발표되는 국가별 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이미 1월말 테러지원국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와 마찰을 꺼려하는 행정부의 속성상, 4월말 보고서 삭제는 미국 법률상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는 구실로 쉽게 용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테러지원국 목록은 대북 경제제재의 핵심이며, 핵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미일동맹 등 다른 대외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 초기조치의 이행과 맞물려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어느 시기에라도 종결을 선언할 수 있는 ‘국가비상 상태’ 해제를 통해, 적성국 교역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이 부과하는 경제제재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북한의 ‘실물’에 답하려고 할 것이다.⁵⁾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의 ‘준거’로 판단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때, 북한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의심하며 핵 폐기 과정을 늦출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핵 폐기 속도 조절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상응 조치 속도와 연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지원국, 적성국 교역법 이외에도 ‘공산주의 국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이라는 근거를 통해 다른 제재와 협상 수단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4월14일을 기한으로 하는 북한의 핵 폐기 초기조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테러지원국 규정으로 인한 경제제재 사항의 일부를 ‘보류’하거나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4월말 발표하는 국가별 보고서에는 포함되겠지만, 이라크나 리비아의 경우처럼,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있다”는 문구 정도는 먼저 포함시킨 이후 내년 국가별 보고서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일부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미국은 의회와의 마찰을 줄이고 북한의 핵 폐기 속도를 가속화하며 반테러협약에 북한을 가입시키는 성과 또한 얻을 수 있기에 유력한 타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1982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어

5) 적성국교역법은 러시아 혁명과 때를 같이하여, 1917년 10월6일, 적성국인 소련에 대한 무역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 적성국과의 금융 거래 및 무역을 ‘조사, 통제 혹은 금지’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가 적성국교역법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1990년 포함된 후 이라크 침공 이후 다시 해제된 이라크의 사례⁶⁾를 보더라도,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미국이 소위 ‘불량국가’들을 압박하고 외교적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정치적 판단 기준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납치 문제 우선 해결 원칙을 고수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할 지점이다. 2000년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가 무산되었다면, 지금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다. 북한이 핵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동아시아 정책에서 미일동맹을 우선시하는 미국이지만, 북한의 핵 폐기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유화책이거나 임시봉변책인지 북한 스스로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꼬일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또한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선순위인지 핵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우선순위인지를 말이다.

6)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2004년 4월 말 발표한, ‘2003년 테러리즘 국가별 유형’ 보고서에서 이라크를 포함시켰지만, 2003년 5월1일 부시가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한 이후, 5월7일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목록에 따라 부과했던 모든 제재를 ‘보류’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실상 경제제재를 모두 해제하였다. 다음해 발표한 2004년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삭제되었다.

동향 |

북한 남포에 진출한 평화자동차총회사

북한에 진출한 최초의 본격적인 합영회사

평화자동차는 1991년 북한 남포공단에 처음 진출하여 7년여 세월을 걸쳐 1998년 1월에 설립한 최초의 본격적인 남북 합영회사이다. 남측의 평화자동차가 70%, 북측의 조선민홍총회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남측이 부이사장은 북측이 각각 맡고 있다. 남포는 평양에서 40km 떨어진 도시로서, 북측은 100만 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제공했으며, 남측은 논밭이 어우러진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워 2002년 4월 준공식을 가졌다. 북에서 자동차가 팔릴 수 있겠냐는 일부의 냉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 북측에



[사진 1] 평양대극장 앞과 평양역 앞의 자동차 상업광고판, 인용: 평화자동차 홈페이지
서도 자동차가 팔려 나가고 있다. 거기에는 평화자동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원이 한몫을 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 시내에 ‘상업 광고판’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고, 외국산 자동차의 반입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10년 동안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품을 수입하거나 자동차를 판매할 때도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영관세의 특혜 대우도 해주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중국 서광자동차의 차체와 부품을 가져와 조립, 생산하고 있는데, ‘회파람’, ‘빠꾸기’ 등 5가지 종류의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의 이름 ‘회파람’(1천580cc)은 박상권 사장이 직접 지어 북측의 동의를 얻었으며, 남포공장과 평양역, 평양대극장 등에 설치된 대형 입간판의 모델은 가요 ‘회파람’으로 유명한 가수 전해영이라고 한다. 또 두 번째 모델로 가솔린을 쓰는 미니밴 ‘빠꾸기’(1천600cc)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청춘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가요 ‘회파람과 빠꾸기’에서 착안해 직접 지어

준 것이라고 한다.⁸⁾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차종은 북한의 산악 지형과 도로 포장 여건 부족으로 SUV 차종인 삐꾸기Ⅱ, Ⅲ로서 전체 판매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기관들과 국영기업들,



[사진2] 작년 5월 제9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시회에 전시된 삐꾸기, 중앙일보(06/5/18)

외국공관, 국제기구, 평양주재 외국회사, 개인 자가용 목적으로 매년 500~600여 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2002년 130대에 그쳤던 판매량은 매년 2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⁹⁾

현재 북한의 자동차 시장의 구매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북한 내부 개혁, 개방의 진전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평화자동차의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과감히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이며, 컴퓨터 같은 계산보다는 기발하고 특이한 ‘직관’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본 동력이다. 투자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발휘는 이후 막대한 초기 선점 효과를 지닌다. 또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특성상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관계’가 중요하며 이는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 등 파격적인 대우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정보’ 선취의 기회를 지닐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중국과 자동차 사업 협력

2.13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 2월13일 중국 선양에서, 평화자동차 남포 공장에서 미니버스 생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5년 합작 계약이 체결되었다. 합작 주체는 북한의 평양자동차총회사와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천(华晨)자동차 그룹이다. 화천자동차 그룹은 지난 해 판매량 기준 9위에 오른 자동차 그룹으로, 이집트,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 생산기지를 갖추게 된다.

북중 자동차 합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화천자동차 그룹은 2005년 8월, 북한의公安부에 110대의 하이스 미니버스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반도신문(半島新聞)에 따르면, 중국측은 해외에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은 관세와 운송비용이 높고, 판매 관리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자원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종의 현지 생산 목적으로 계

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번 계약은 중국 화천자동차 부총재 허귀화(何國華)의 말처럼, "북중 자동차 합작의 시작이며...북중 양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계약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12,000대의 쥘베이-하이스 미니버스를 평화자동차 남포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하이스 미니버스는 11인승으로 봉고차와 비슷한 차종으로 중국 돈 6만원(한화 약 800만원)에 팔리고 있다.

합작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3] 북중 자동차 합작 사업 조인식, 半島新聞(2/13)

올 5월부터 2012년까지,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 분해 공급) 방식으로, 북한 측에 차체와 부속품을 공급하고, 기술인원을 파견하여 남포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북중 자동차 합작을 체결한 중국 기업 또한 평화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변화할 북한을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다. 또한 북측에서 생산되어 남측에 판매되는 상품은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는 이점 또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화천자동차 집단 심양 수출입회사 이사장 단룡지에(单龙接)는 반도신문 취재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북한 공장에서 생산한 하이스 차는 먼저 북한에서 판매한 후에, 한국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다. 장래에는 중화(中华) 중형승용차 또한 조선반도에 진출하려고 한다."10)

2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 일본, 결국 왕따가 되려는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회담

7일 오전 이틀간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은 예상대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작년 2월초 베이징에서 회담이 열린 이후, 1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공식 회담은 2.13 합의에서 보여준 일본의 태도로 보아 별 성과가 없을 것이 이미 예상되었다.

예상대로, 일본 대표단(단장: 하라구찌 고이찌)은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종전의 강경한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오후에 북한대사관에서 열기로 한 회담을 북한 측이 거부하면서 회담이 중단되었다. 조선신보(3/8) 보도에 의하면, 당황한 일본 대표단 관계자가 북한대사관을 찾아감으로써 결렬의 위기를 모면하고 오늘 오전 북한대사관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45분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죽은 사람을 살려 내라’는 일본의 궤변

일본은 7일 오전 회의에서, 납치 피해자가 북한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는 전원 살아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일본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2004년 일본은 경찰관계자들이 포함된 정부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 측으로부터 귀국한 5명의 납치 피해자 이외는 모두 사망했다는 최후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일본은 그 때 전달받은 요꼬다 메구미의 유골의 DNA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북한은 DNA 감정 결과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가짜'라면 반환하고 양측이 공동으로 DNA 감정과 관련한 전문가 협의를 가지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가짜'만을 되뇌며 현재까지 납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치 9.19 공동성명을 파탄내기 위해 미국이 BDA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일본은 DNA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은 없이 북에 대해서는 무조건 '생역지'를 쓰는 것은 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의 보수들의 전형적인 공통 사항이다.

2.13 합의 4조에서는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 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2002년 9월17일, 평양선언에서,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이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평양선언에서는, 또한 "무상자금 협력, 저리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실시"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주요 논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은 일본의 '과거 청산' 문제

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1945년 이전에 있는 조선인 강제 연행, 학살 만행, '위안부' 문제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재산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평양선언의 내용에 따라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토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평양선언에 명시된 재산 및 청구권의 포기과 경제 협력의 실시는 지난 날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며, 강제 연행 등의 문제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람은 재산이 아니며 일본이 저지른 인권 유린 범죄는 시효도 없으며 재산문제처럼 경제협력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몇 가지 이유

일본이 납치피해자 문제를 강하게 들이대는 데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대북 강



[사진4] 일본 도쿄에서 3일 열린 총련 탄압 규탄대회, 조선신보(3/5)
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총련 사무소들과 조선학교를 포함한 14곳, 재일동포와 관련한 대상 39곳을 장갑차까지 동원하며 강제 수색하였다. 이에 총련은 지난 3일 3.1 운동 88주년을 맞이하여, 14년 만에 도쿄에서 7,000여명, 강끼에서 5,000여명이 참가

다음으로, 북일 관계 정상화 회담에서 일본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배상과 협력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납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0년 북미 관계에서 핵심적 의제 중의 하나였던 '테러지원국' 협상에서 '납치'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테러지원국 해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납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정치적 오관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6자회담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또한 숨겨져 있다. 소위 전후체제 탈피론을 통해 평화헌법을 완전 개편하여 군국주의화로 나아가려는 속셈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일본과의 협상은 별 소득이 없으며, 북미관계의 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차적인 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동맹의 속성상 북미관계는 북미관계 개선 속도에 연동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2.13 합의에서처럼 일본만 '왕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고 결의안 채택이 임박하자 아베 정권은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세코 수상 보좌관과 주미대사 등을 통해 막후 공작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다.

2.13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배신했다"고 주장하는 남한의 보수처럼 일본 또한 무척 혼란스러웠던 모양이다. 세상 사람은 자연스러운데도 '변화'에 화들짝 놀라는 속성, 그것이 '수구'의 본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만들어 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3/5)처럼,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도 병사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 유괴, 납치하여 전장에 끌고 다니며 집단적인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예는 없다. 군 '위안부' 범죄는 오직 야만적인 섬나라 일본에만 있는 잔악한 죄악"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북미 관계 정상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국제 사회의 압력을 거스르고 끝까지 '왕따'가 되어도 버틸 수 있을지, 미일동맹을 우선시하는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단신 |

황해남도에서 새 수력 발전소 건설 시작(노동신문, 3/1)

황해남도 배천군에서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미 물막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현재는 기초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봄밀, 보리심기 한창(노동신문, 3/1)

평안북도의 협동농장들에서 봄밀, 보리심기가 한창이다. 이는 최근의 두벌농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먹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북의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식수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진행(노동신문, 3/2~3/5)

식수절(3/2)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봄철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군인 쉼기 모임을 2일 금수산 기념 궁전 수목원에서 진행한 후, 잣나무, 수유나무를 비롯한 10여 종에 1만 3,000여 그루를 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식수절 맞이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천의 기상(집단적 혁신)에 따라 경제 건설 박차(노동신문, 3/2~3/4)

노동신문(3/4)에 '태천의 기상으로 총진군하자'는 만수대 창작사의 선전화가 실렸다. 문천탄광에서는 압축기의 가동률을 최대한도로 높여 굴진 속도를 전보다 1.3배 높이고 있으며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무산탄광연합기업소, 리원광산, 신의주신발공장, 대안전기공장 등의 집단적 혁신을 소개하며 "경제강국 건설에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에 토끼요리 전문 식당 등장(조선신보, 3/6)

최근 북한에서 토끼 기르기 운동이 대중화 되어 토끼고기 생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평양에 토끼요리 전문식당이 등장하고 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에서는 시안의 모든 구역, 군들에 토끼고기 요리 전문식당을 새로 내올 것을 계획하고 먼저 보통강 구역 종합식당을 시범단위로 정하였다. 식당은 문을 연 첫날부터 손님들의 호평을 받았고, 사회급양관리국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대성구역과 만경대구역을 비롯한 중심구역들과 주변 구역, 군들에 토끼요리 전문식당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1) 국회예산처(06), 개성공단 사업 평가, p. 97
- 2) 노동신문(07/3/05), 동북아시아의 냉전 구도는 해체되어야 한다.
- 3) CRS Report PL31696(06),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 4) 김성철(2001), 국제금융기구 사회주의 개혁, 개방 - 중국, 베트남 경험이 북한에게 주는 함의, 정영철 (2004), 북한의 개혁, 개방, p. 121에서 재인용
- 5) CRS Report PL31696(06),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 6)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03/12/09), 최소한 '말대말'공약, 첫 단계 행동조치의 합의 제안
- 7) CRS Report RL30613(04), North Korea: Terrorism List Removal?
- 8) 연합뉴스(04/3/25), 북한에 자동차 600대 판매 목표, 평화자동차
- 9) 경향신문(05/3/25), 북서도 SUV' 잘 나갑니다'
- 10) 半島新聞(2/13), 华晨将在朝生产 "海狮" 5月份实现投产